

3중 장벽에 갇힌 새만금재생에너지

조동용 의원,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시 제3선거구)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 오늘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전라북도 및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분담조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20년 동안의 REC 가격보장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및 민간 기업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3%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의 중복 부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는 개발이익공유화금액(또는 개발이익환수금) 이외에도 송배전선로 설치 등의 계통연계비용마저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계통연계비용은 당초 6,6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상향조정, 5조원 남짓 규모의 총사업비에서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3년 동안 60%이상 폭락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REC 가격의 하락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사업자에게 겹겹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전북도와 3개 시군을 비롯한 발전사업자에게 3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을 새로운 도약이 아닌 또 하나의 절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시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대통령, 23년 만에 방한하는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 지역·글로벌 이슈 논의... 무역·관광분야 MOU 2건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을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펠리페 6세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3~24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스페인 국왕의 방한은 지난 1996년 펠리페 6세의 아버지인 후안 카를로스 1세의 방한 이후 23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펠리페 6세의 방한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펠리페 6

세는 우리 의정대를 사열하고 고양시 초등학교생들로 구성된 환영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한국과 스페인은 오후 3시 20분부터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는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 지역·경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과 정부 관계자가 8명씩 배석하는 '1+9

형태의 회담이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원중 국가안보실 2차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스페인 측에서는 조셉 보렐 폰테예스 외교·EU·협력부 장관, 마리아 레예스 마르토 이예라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하이메 알폰신 알폰소 왕실 시종장 등이 배석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2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는 관광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ICEX) 간의 협력 MOU도 체결됐다.

/뉴시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재정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 더불어민주당·무주)를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23일 새만금 켄버리 개최지(부안군 변산면)와 전북 학생해양수련원(부안군 변산면)을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재정사업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예결위 현장 의정활동의 첫 번째 방문지인 새만금 켄버리 개최지에 대해서는 새만금 홍보관에서 전북도의 기반시설 설치, 홍보활동, 세부 프로그램 발굴 등의 준비상황과 애로사항 등 청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으로부터 부지매입 계획을 들은 후 켄버리 공원, 직소천 등을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둘러보았다.

황의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3년 세계켄버리 대회를 계기로 우리 전북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었다”며 “성공적인 켄버리 대회를 위해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기화(더불어민주당·군산1)의원은 2m높이의 켄버리 부지 준설로 인해 더 깊게 생기는 내부 하천의 수질개선 문제를 제기하며, 새만금의 전반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당부했다.

두세훈(더불어민주당·완주2)의원은 “켄버리가 개최되는 8월 중순은 매우 습한 시기로 냉습식품 등으로 과연 무더위가 해결될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철저한 무더위 대책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새만금 켄버리 개최지와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재정사업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성경찬(더불어민주당·고창1)의원은 글로벌센터 건립예정과 관련하여 연약지반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켄버리 이후 켄버리 기념관 등 활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전북교육청 소속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수련원 업무보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청취하고 수련원 운영의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야영수련활동, 안전체험 시설들이 매우 부족하다”며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등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더불어민주당·익산2)의원은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양 안전체험관 건립에 속도를 내어 줄 것을 요청하며 안전체험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을 생활화 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날 재정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오는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 정리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극일에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건의

전북도는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회원사 97개사의 뜻을 모아 탄소소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우리나라의 탄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탄소산업 가치 사슬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탄소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산·학·연간에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소산업 기술을 향상시켜 탄소융합산업의 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건의서에 우리나라 탄소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부빨리 국회 법사위에서 탄소

소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건의서 작성을 주도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 유영목 에이테크솔루션(주) 대표는 “탄소산업 기술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감한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더불어 국가 전략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조합 회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며 이러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나타냈다.

이어서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면 탄소

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예산의 집중투자가 유도되어 탄소산업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탄소소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탄소산업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극일(克日)과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이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지난 2017년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8년 2월에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후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이 맛이 청정라거다!

리얼탄산 100% | 청정맥아 100%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T

1. 이 맛은 전라도의 청정맥아와 리얼탄산으로 만들었습니다. 2. 이 맛은 전라도의 청정맥아와 리얼탄산으로 만들었습니다. 3. 이 맛은 전라도의 청정맥아와 리얼탄산으로 만들었습니다.